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식과 행동 : 선거 과정을 중심으로

김혜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정치개혁법의 국회 통과로 깨끗한 정치 풍토를 위해 올바른 시민의식과 행동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정치 비리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그릇된 시민의식과 행동의 문제를 금품·향응 수수, 투표기권, 흑색선전 유포, 지역연고 위주의 투표 및 선거 운동원 및 동원 청중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원인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심리 기제는 다수의 행동 여부에 의해, 또 타인의 평가에 의해 행동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의식구조, 「뇌물」과 「인사·성의·존경」의 혼동, 몰개성화, 투표 효능감 저하·정치무력감, 왜곡 유도되어진 집단주의 성향에 의한 정당 선호 등으로 분석하였다. 보다 주체적이고 성숙한 시민정신과 행동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확대, 학교교육에서의 공정한 투표행동의 경험을 통한 역할연습과 정치사회화 그리고 이러한 사회교육·학교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의식과 행동 관련 연구 분야의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문민정부 출범이래 우리 사회에는 개혁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 넘쳤고 실제로 정부의 주도하에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입시부정 수사등 여러 개혁의 시도들이 행해졌다. 특히 얼마전에 통과된 정치개혁법은 우리 사회의 제1의 비리·부패의 원천으로 지적되어 왔던 정치부패에 과감한 메스를 가하고자 시도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실상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정치

에 의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 거의 모든 영역이 통제되어 왔고 따라서 정치의 부패, 부조리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총체적 부패의 원천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여러 조사들에서, 이러한 문민정부의 일련의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의 전반적 정치 현실에 대해 썩 긍정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제일 개혁이 필요한 부문이 정치나 혹은

정치인으로 여전히 지각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1993; 한덕웅, 1994; 현대 사회 연구소, 1993). 이제까지의 정치부패의 문제는 음성적·비공개적 정치자금 조달, 비민주적 정당운영, 비합리적 행정구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극심한 부패와 부정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즉, 당선되기 위해서 몇십억씩의 돈을 쓰고 일단 당선되면 투자한 돈에 대한 수지를 맞추고 다음 선거에서의 대비를 위해 기업인에 대한 특혜·행정비리·공작정치의 행태를 벌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가 핵심이 된다(이남영·한우창·김장권, 1993). 이번에 통과된 통합 선거법은 “돈은 적게 들이고 정책 대결은 충분히” 하는 선거를 만들어 이와 같은 선거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법”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실행의지이다. 또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일반 시민의 올바른 정치의식과 감시 및 행동이다. 왜냐하면 통합 선거법이 “돈은 묶고 말은 풀” 개혁법이지만 한편 정치인들로 하여금 평상시 지역 구민들에게 잘 보여 두려고 온갖 방법(경조사참여, 지역개발 약속 남발, 사조직 동원)을 동원하도록 할 수 있어,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교묘하고 집요한 형태로 선거 부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이 제대로 기능하여 우리의 대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 의식, 시민정신과 행동이 필요해 진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의 부조리·부패·비리를 구조적·제도적 차원과, 그에 맞물려서 그러한 정치 부조리를 부추키는 혹은 적어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릇된 시민의식과 행동으로 구분하여, 특히 시민정신과 의식에 보다 중점을 두어 논의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비리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에 가깝다. 그보다는 그러한 강조의 이유는 첫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 개혁

법의 통과로 앞으로는 시민의 바른 정치의식과 개입이 깨끗한 정치와 선거를 위해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둘째,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정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

먼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치적 안정 (42.6%)을 꼽고 있다(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93). 이로부터 정치 문제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최근의 한 의식조사 연구(한덕웅, 1994)에 의하면 정치인의 부정부패/부조리를 66.9%의 사람들이 지적하여 환경문제(79.5%)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표 1. 정치현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N)

응답범주	88년 12월	89년 12월	93년 9월
매우만족스럽다	1.3(20)	0.4(6)	2.4(36)
만족스럽다	6.1(91)	2.8(43)	14.3(219)
그저 그렇다	34.9(510)	26.4(406)	47.5(727)
불만스럽다	45.9(687)	50.4(774)	26.6(406)
매우불만스럽다	12.5(187)	19.9(306)	9.2(141)
무응답	0.1(2)	0.1(2)	0.0(0)
계	100.0(1497)	100.0(1535)	100.0(1529)

출처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국민의식조사 (1988).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국민의식조사 (1989, 1993).

그러면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표 1에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대한 만족도를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의 추이가 나타나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국민의식조사 1988 ; 서울대학교 인구및 발전문제연구소 국민의식조사 1989, 1993).

표 1에 나타난대로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현재 만족하는 사람은 16.7%이고 불만족하다는 사람은 35.8%이며 대부분(47.5%)은 그저 그렇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88년이나 89년에 비해 불만족한 사람의 비율이 감소하였고(58.4%, 60.3%, 35.8%), 만족하다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7.4%, 3.2%, 16.7%)만족할 만한 변화수준으로까지 되지는 못하였고 '그저 그런' 정도로 변화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민정부에 의해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등의 여러 개혁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으나,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의 전반적 정치현실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하다고 느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도에 대한 한 최근 조사(현대사회연구소, 1993)에 의하면 정치권의 부패가 다른 어떤 부패 문제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84.3점 : 100점이 "아주 심각하다"임) 지각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정치 부패와 불만족스러운 정치현실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정치인의 부족한 자질과 부정부패로 지각되고 있음은 여러 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0 ; 현대사회연구소, 1993). 이와 같이 정치 부패/비리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 의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불만족스럽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치 비리와 부조리의 실상 : 구조적 · 제도적 문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비리와 부조리의 문제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의 측면에서 간단

히 고찰해 보겠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깨끗한 정치의 핵심은 공명한 선거에 있고 우리나라 정치 부패의 문제는 부패선거에 집약되어 나타나므로 선거에서 나타나는 여러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하겠다.

먼저, 14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총선 직후 선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한 결과를 검토해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품 · 선심공세를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각하였고 관련개입, 인신공격 및 흑색선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유혹등을 그 다음의 중요 문제점으로 꼽았다(서용석, 1992). 14대 대선은 이전 선거에 비해 비교적 공정하였다는 측면도 있으나 여전히 부패 · 타락 선거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였다(손봉숙, 1992).

이와같이 우리 정치 · 선거에서의 주요 문제점은 금권선거와 그와 관련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의 문제, 관련개입의 문제, 흑색선전, 또한 비민주적 정당 공천과정등으로 볼 수 있다.

표 2. 선거의 문제형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분포

(단위 : %)	
선거의 문제점 유형	분 포
금품, 선심공세	39.7
인신 공격, 흑색 선전	19.4
관련의 개입	22.1
공약의 남발	1.2
선거 폭력	0.2
유권자들의 무관심	0.3
유권자의 유혹	7.0
언론의 보도 형태	3.3
기타	3.0
무응답	0.9
합 계	100.0%

출처 : 서용석 (1992)

금권 선거와 음성적 정치자금 총당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정치자금은 주로 선거 비용으로 들어간다. 지난 13대총선에서 여당의원

은 많게는 30~50억을, 야당의원은 최소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선거비용을 썼다고 한다(김광웅, 1992). 14대 총선때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협의회 등에 의한 공명 선거 캠페인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선거는 여전하여 선거비용은 더 들었으리라고 추산된다.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조달의 공식 통로는 국고 지원, 의원 세비, 후원금, 기탁금 및 당비등이다. 14대 총선때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유권자 1인당 400원씩하여 10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민자당이 약 75억원 민주당이 25억원을 받았다. 그밖에 의원 세비 및 입법 활동비, 우표, 전화요금 등의 연간 약 450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매달 지출은 이보다 훨씬 더 들어 의원들은 지구당 운영비(사무실 비용, 경조사 꽃값 및 부조금), 개인경비등의 지출을 합쳐 매달 500만~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이 돈을 친지, 동창, 기업으로부터 혹은 개인 재산에서 비공개적, 음성적으로 조달하는 수 밖에 없다. 선거때에는 조직 활동비(사조직 동원, 사랑방 좌담회, 교회나 복지시설 방문), 홍보물 제작비 및 배포비, 청중 동원비, 식비, 전화비 등의 선거비용이 몇십억씩 드는데 이러한 선거 자금은 평상시의 자금조달 방법과는 달리 전체 후보자의 약 65%가 주로 개인 재산, 친구 및 친지의 도움 그리고 후원회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대답하였고 약 25%만이 정당 지원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거 자금은 주로 개인과 정당이 음성적 방법으로 모은 정치자금으로 충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율곡 사업등의 대규모 정부주도 사업, 기업에 대한 특혜와 맞바꾸는 기업비자금을 통한 정부 여당의 정치자금 마련(예를 들어, 정주영씨가 6공때 청와대에 2백억을 기증했다고 폭로했다), 의원 개인이 각종 상임위 활동중의 각종 로비를 통해 벌어들이는 방법(예를 들어, 국회 노동위의 돈봉투 사건), 토지 개발에 대한 정보를 미리 빼돌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국토 의원'들 등 각종 어둡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서 쌓아놓은 돈을 선거때 몰쓰듯이 쓰고 일단 당선만 되면 검은 돈과 결탁하여 소요된 비용 이상을 얻어내고 결국 이러한 악순환에 의해 물가가 인상되는 등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와같이 음성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조달되는 것은 정치자금 내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 음성적 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며 당국의 법실행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63%)든지, "법대로 살다가는 손해만 본다"(66%)든지 하는 가치관의 몰락과 불신 풍조, 냉소주의의(서울대 인구및 발전문제연구소, 1993) 사회풍조와 정치인들의 윤리의식의 상실도 그 한 원인이 된다.

정당 운영·공천 심사의 비민주성

우리 나라 정당은 조직은 방대하지만 주로 선거를 중심으로 기능하여 그 기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별 기능은 하지 않지만 방대한 조직을 존속시키느라, 또 선거때에는 이 조직을 작동시켜 표를 모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느라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들게 된다. 정당의 조직은 계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총재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적 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공천의 기준은 '당선 가능성' 즉, 돈과 조직력을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고 의정 활동의 성실성이라든지 지구당원들의 의사라든지 무시된다. 이와 같은 구조와 기능에 의해 우리나라 정당들은 국민에 의해 신뢰받고 선호되고 있지 못하며(예를 들어, 14대 총선전에 약 반의 국민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정책 정당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금권선거, 타락선거 등의 정치 부패에 일몹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의 관권 개입

우리나라 선거에 관권이 개입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도처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4대 총선때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된 군 부재자 투표에 있어서의 선거부정사건이다. 당시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밝힌 양심선언에 의하면 군대내 여당 지지율이 80%이상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사병들에게 가하고,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투표하도록 상황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공선험 활동보고서, 1992). 이밖에 안기부의 흑색선전 공작과 통·반장의 '사랑방좌담회'등의 선거 운동에의 개입, 또 한준수 연기군수가 폭로한 관권개입 사건등이 불법선거·타락선거의 핵심에 관권의 개입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의 흑색선전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흔히 인신공격적인 근거 없는 흑색선전들이 난무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여자문제, 돈문제, 사상의 문제등 다양하나 그 표현은 대부분 낮뜨거울 정도로 원색적이다. 예를 들어, 14대 총선에서 안기부 요원들이 강남 을 선거구의 H 후보의 사생활에 대한 흑색선전을 유포시키다가 붙잡힌 바 있다. 또한 여당은 야당 후보들의 "색깔"을 의심하도록 하는 흑색선전을 흔히 사용한다. 지난 지방의회 선거에서 낙선한 한 후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이 후보는 교수 출신으로 전혀 운동권 교수가 아님). "...내가 김대중씨 오른 팔이라는 소문도 떠돌아 다녔다. 나는 김대중씨를 만나본 적도 없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서야 알았는데 내가 본치를 버리고 후처를 데리고 산다는 소문도 아파트 단지에 널리 퍼져 있었다" (김광웅 편, 1992).

그뿐만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의 이름으로 싸구려 화장품을 보내어 그 후보의 이미지를 흐리고 유권자의 종교가 아닌 종교를 찬양하는 글을 상대 후보의 이름으로 보내어 이간질을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열한 수법으로 무고한 사람을 깎아 내리고 이름을 더럽힌다. 또한, 더욱 교묘한 흑색선전은 여론 조사결과인 것처럼 포장하

여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도록 대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 밀리고 있다」 「...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등이 그것이다(경향신문, 1992. 12). 이러한 흑색선전은 일단 시작되면 흔히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고 과장되어 선거 풍토를 불안하게 하고 더럽히며 후보들에게 정신적·실질적인 타격을 입혀 선거후에 까지도 그 후유증이 지속된다.

이상에서 우리 정치에서 나타나는 비리, 부패와 부조리를 정치자금·선거자금 조달의 문제, 정당운영 방식의 문제, 관권 개입 및 흑색선전의 문제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얼마전에 통과된 정치개혁 관계법은 이러한 정치·선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의 미를 간단히 검토해 보겠다.

정치개혁법이 선거 풍토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정치개혁 관계법은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과 지방자치법의 개혁으로 이제까지 행해진 금권선거·타락선거의 주범인 「정치 자금은 묵고, 그 대신 「말은 꾸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법이다. 이법의 주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각종 선거비용을 대폭 제한해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평균 6천 5백만원으로 한정했다. 또 선거 비용의 입출금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여 금융실명제에 상관없이 선관위가 해당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그 동안의 금권선거의 주범이 되어 왔던 선거 운동원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그대신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 선거 운동기간중 당원 단합 대회와 전단형 소형 인쇄물의 가두 배포를 금지했다. 그대신 소형 인쇄물 발송은 선관위가 전담해 선거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셋째,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개인 연설회와 가두

연설이 허용되어 후보자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정견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선거부정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5년간,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1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당선무효 연대책임 범위를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까지 확대했다. 후보자 비방죄도 강화되어 공연히 사실을 왜곡하여,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들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정치자금 기부를 무기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당쪽에서만 쏠리던 정치자금이 야당으로도 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새로 개정된 정치 관계법은 잘 준수되기만 하면 금권선거·흑색선전등의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합리적 사고방식과 정책을 제시하는 참신한 인물이 당선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개혁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는 역시 제도일 뿐이고 그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제도와 관련된 사람들(정치인, 정부, 유권자)의 굳건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실상 새 선거법으로 금권·부정선거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령, 선거 기간 훨씬 전부터 돈을 풀어 종친회·계모임·동창회 등의 사조직을 다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조사 인사·환보내기등이 더 극성스러워지고 지역구에만 신경을 쓰는 등 자칫 국회의원이 지방의원화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법을 살려 공명선거, 깨끗한 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올바른 시민 정신과 주권 의식 그리고 고발 정신이 필요하고 그와 아울러 당국의 굳건한 법 집행 의지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시민정신이 정치가들에게 유형, 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정치가들로 하여금 더이상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잘 인식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 성인 남녀 1000명을 전화로 인터뷰한 최근의 여론조사(공보처, 1994)

에서 나타난 바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개혁법이 깨끗한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73.3%), 한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대다수가 5천3백만원의 선거비용 한도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48.8%). 또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국민(55.0%)이고 그 다음이 정치인(24.8%), 정부(14.3%), 선거관리위원회(3.5%)의 순서로 꼽았다(한겨레신문, 1994. 3. 14).

그러면, 이제까지의 정치·선거와 관련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시민의식 그리고 행동은 어떠했는가?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정치 및 선거가 금권선거,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면 그 주 원인은 물론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제도와 그 구멍을 이용해 온 정치인들에게 있지만 분명히 일반 국민의 그릇된 의식과 행동이 한 몫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최근 조사(이남영 등, 1993)에서 나타난 바로는 정치가 깨끗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최고 권력자 의지의 미흡”(45%)이고 그 다음이 “국민 의식의 부족”(33%)으로 들고 있다. 다음에, 정치와 관련된 일반 시민의 의식과 행동을 특히 선거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 보겠다.

선거에 있어서의 시민의식과 행동

선거 부정과 관련된 시민 의식과 행동의 측면 중 특히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투표기권, 지역연고 위주의 투표, 흑색선전 유포 및 선거운동원과 동원청중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심리기제와 문화적 요인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금품·향응 수수와 요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선거는 금권선거로 얼룩져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91년도 기초광역의회 선거 전 실시한 전국 유권자에 대한 조사 결과 (표3), 선거에서 물품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유권자가 전체의 44.1%, 음식을 대접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이 33.9%, 금전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이 14.6%, 관광 여행을 제공 받은 사람이 5.7%이며 취직·이권 약속을 받은 사람이 2.5% 이었다. 이러한 금품·선심 공세는 대상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 학력이 낮을수록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권자의 위법선거운동 사례 경험 분포

위법선거운동 사례	빈 도(%)
금 전 수 수	14.6 %
물 품 수 수	44.1 %
음 식 접 대	33.9 %
관 광 여 행	5.7 %
취 직 · 이 권 약속	2.5 %
공 직 자, 통 · 반 장 · 직 장	25.6 %
상 사의 지 지 권 유	
합 계	100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결과분석보고서(1991)

이와 같이 금품·향응등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선거때면 흔히 있는 일이라” 라고 응답한 사람이 29.1%,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21.2%), “지지하는 후보자가 주는 것이라”(8.8%), “내용을 모르고 무심코 받았다”(7.1%)이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요구하여 받은” 사람은 6.4% 이었다(표4 참조). 이와 같은 유권자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금품·향응 공세는 유권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요구하여서이기 보다는 후보자 쪽에서 제공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받게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관행으로 여기거나 거절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식·사회의식이 아직도 낮아 금품·향응의 거래가 우리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남들도 다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생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게 된다. 그러나, 한편 금품·향응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유형은 정치의식·사회의식은 있으나 ‘정치인들도 결국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득을 챙길테니 나도 내 이득을 챙겨두자’ 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이득추구형(손동현, 1993)으로 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품·향응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우리사회에 점점 만연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4대 총선에서 금품이나 음식 대접을 받은 경우에 그것이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3), 흥미롭게도 92.3%의 유권자들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금품 제공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람은 4.3%에 불과하였다.

표 4. 후보자의 지지와 관련하여 금품·음식 접대 등을 받은 이유

응 답	빈 도(%)
선거때면 흔히 있는 일이라	29.1 %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21.2 %
지지하는 후보자가 주는 것이라	8.8 %
내용을 모르고 무심코	7.1 %
직접 또는 간접 요구	6.4 %
무응답	27.4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분석보고서 (1991)

만약, 금품제공이 아무런 효과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후보자들은 어째서 금품·향응 제공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일까?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후보자들이 금품·향응의 요구나 효과에 대해 유권자들과는 다르게 지각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국회의원들의 약 46%가 유권자나 친지로 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요구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약 66%의 국회의원들이 금품제공을 하지 않으면 지역구에 성의없는 의원으로 유권자들에 의해 평가되어 낙선할 위험이 커진다고 응답하였다(이남영 등, 1993). 이러한 지각에 있어서의

차이는 여러 이유에 기인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권자나 후보자 양자가 모두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사표현 양식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클 수 있고 따라서 유권자의 무심한 언행을 후보자가 왜곡 지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선거에서의 금품·향응 제공 혹은 수수에 대한 이러한 오해 지각 양상에 의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금품·향응의 제공이 선거 때마다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즉,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금품을 바라는데 그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성의없고 인사성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유권자들을 “섭섭하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선거때면 으레 관행으로 금품·향응이 제공되는 것이므로, 또 「인사」와 「성의」를 보이는 사람을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눈감아 주게 된다.

이러한 양상 - 「인사와 성의」로서 뇌물을 주고 받는 - 은 실상 선거에서의 금품수수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인데 이러한 것은 우리 문화에 존재하는 독특한 「뇌물의 심리」를 나타내어 준다. 즉, 우리의 문화와 의식구조에서는 「뇌물」과 「인사·성의」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혼동되어 있어 흔히 뇌물이 「인사·성의」로 포장되어 정당화 된다. 혹은 더 나아가 뇌물은 「존경」의 표시로까지 여겨진다. 또한 그러한 행동을 적당히 눈치껏 행하지 못하여 뇌물을 바치지 않거나 뇌물 수수를 거절하는 사람은 오히려 인간미가 없고 인사성이 없으며 심지어는 남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몰린다. 그래서 ‘주지않을 수가 없고’ 또한 ‘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뇌물이 정당화되어 거래될 수 있는 데에는 우리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어떠한 행위의 정당성의 기준이 법이나 객관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하는 행위이나 아니냐에 달려있어(한규석, 1991), 사람들이

모두 하는 행위이면 그것이 설사 객관적 기준으로 부정행위일지라도 정당한 행위로 동조하게 되는 경향에 의해 가능해진다. 즉, ‘선거때면 으레 하는 일’이니까 괜찮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뇌물은 이렇게 다수의 행동에 대한 동조심리에 의해 또 관행에 의해 「인사·성의」로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권력과 힘에 대한 「공경과 존경」의 표시로 간주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는 사람은 모사꾼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받는 사람은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이 충족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뇌물심리」는 14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의 다음과 같은 관찰에 잘 나타나 있다. 「제 지역에 한 유권자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A라는 후보가 와서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것과 B라는 후보가 기십만원을 주면서 “선생님 저를 위해 움직이시려면 경우에 따라 커피값도 들고, 설렁탕 값도 들고 할텐데, 이것 얼마 안됩니다만 비용으로 좀 써 주십시오”하면서 절을 하고 가는 것과는 인간인 이상 기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만 하고 부탁한다는 사람은 ‘아하 저사람은 내가 표가 별로 없는 줄 아는 모양이지’하고 그 사람이 자신을 덜 존경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몇십만원이라도 놓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는 구나’해서 같은 값이면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맛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인정, 자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돈주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주면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이은진·김석준의, 1992).

이와같이 이렇게 우리의 선거에서의 금품공제는, 그것을 「나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행위」로 보다는 인사성 혹은 존경의 표시로까지 여기는 유권자들의 의식과 또한 이러한 유권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태도와 행위에 의해 지속되는 것이다.

투표기권

14대 총선의 투표율은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투표참여운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선거에서보다 낮아 71.9%에 불과하였다(표5 참조). 또한, 도저촌고(都低村高)의 투표율 현상도 여전하였으며, 20대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의 기권율이 높았고(20대 25.6%, 50대 9.1%),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또 소득이 높을수록 기권율이 높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결과보고서, 1992).

이와같은 투표 참여율의 하락은 미국등의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1960년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63%)에 비해 1980년의 선거에서는 54%만이 참여하였고 점차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율의 하락은 유권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또 미국 경제의 어려움이 증가한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특히 저소득층에서 정치무력감과 효능감 상실이 증가해 온 데에 기인된다(Kinder & Sears, 1985).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문민정치와 민주 선거의 역사가 짧은데 이와같이 기권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고학력일수록 기권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여러가지 우려를 자아내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집단의 사람들은 정치의식이 높고 그만큼 비판의식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권했을 때 그만큼 선거의 정치에 대한 비판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총유권자중 20~30대의 비율이 57.2%임을 감안할때 젊은층의 기권현상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손봉숙, 1992). 실제로 기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은 여당(31.7%)보다는 야당(민주당 36%, 국민당 19.5%등)에 있었다.

이렇게 기권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개인주의 경향(차재호, 정지원, 1993)과 정치에 대한 관심의 감

소, 또 그동안의 타락, 부정선거 또는 3당 합당으로 인한 정치불신이나 정치무력감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1992)에 의하면 14대 총선의 기권자들이 답변한 기권 이유는 '개인사정 때문에' (44.3%)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후보자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 (19.3%), '찍을 만한 후보자가 없기 때문' (14.2%), '내가 투표를 하든 안하든 투표 결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 (5.7%) 등으로 나타나(표6 참조) 정치내의 기권 이유로는 정치불신과 무력감, 정치효능감 상실이 추가됨을 알 수 있다.

표 5.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단위 : %)

구분	초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투표율	95.5	91.9	91.1	87.8	84.3	72.1	73.2
구분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투표율	73.2	71.4	77.1	77.7	84.6	75.8	71.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3대 국회의원선거총람」(1988)

이와같이 특히 선거관심과 투표효능감의 심리적 요인들이 투표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찬욱, 1993 ; 이남영, 1992). 선거에 있어서의 뚜렷한 쟁점(예를들어, 민주화)의 존재나 야당바람, 체제변화 가능성 여부등에 의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선거관심이 낮을 경우 기권율이 높아진다. 또한 '내 한표가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든지와 같은 유권자의 투표효능감과 자신감의 정도가 기권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기권자중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의 판도에 대해 "해봤자 뻔한 결과", "그 사람이 그사람" 등의 냉소주의와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어 변화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권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투표효능감의 저하로 인한 기권경향은 특히 고학력·전문직 종사자들이 정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권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이들중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까지

투표해서 내가 찍은 후보가 된 적이 한번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에서도 이와같은 정치판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비판, 다른 유권자 집단의 정치의식이나 비판력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스스로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에 대한 회의와 자조감이 엿보인다. 또한,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불만·불신이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 층에 점점 팽배해 지는 개인주의 성향과 맞물려 ‘정치’ 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무조건 멀리 하는 것이 현명하고 멋있는 처신이라고 생각하는 풍조마저 생겨나 기권행위를 부추킨다.

표 6. 14대 총선에서 나타난 기권자들의 기권 이유

항 목	빈도 (%)
찍을 만한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14.2
내가 투표를 하든 안하든 투표결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	5.7
정치나 선거와 같은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7.4
후보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9.1
후보자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19.3
개인사정 때문에(바쁜 일, 여행, 병, 집안이나 직장사정)	44.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식조사 결과 (1992)

이와같은 경향은 지난 지방의원선거에서의 지역주민과의 현장 인터뷰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옛날 습관, 전례가 잘 안 없어진다. 먹고 마시고, 식당마다 공공연히 딱 찬다. 배운 사람은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엔 유행인가보다. 친구를 만나보면 전부 관심없다고들 한다” (조혜정, 1992, 기초의회 후보자 선거사무원과의 면접). “우리 집에서 4번(시민후보)이 인기가 제일 좋아요. 우리반 애들네 집에서 그렇게요. 대학 교수데요. 그 사람은 텔레비전(환경문제 토론 프로)에도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내일 투

표 안하신대요. 우리반 애들네 집에서 투표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해봤자래요” (김형국, 1992, 광역의회 선거시 강남지역거주 아동과의 면접). 이와같이, 특히 정치에 대한 비판력이 높고 변화를 바라는 층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효능감 상실에 의해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를 포기하게 되고, 이들의 다수가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그들의 예상대로 투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들의 투표효능감과 자신감과 선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악순환(혹은 자기이행적 예언효과(self-fulfilling prophecy, Rosenthal & Jacobson, 1968)이 반복되어 우리 정치와 사회의 발전이 지연되게 된다.

흑색선전유포

앞에서도 검토하였듯이 선거에서의 흑색선전은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상대후보를 깎아내리고 중상·모략하는 소문을 퍼뜨려 유권자들을 심리적으로 조작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선거판에는 으레 후보자들의 여자문제·돈문제·사상문제·자질문제 등에 대한 원색적이고 저질의 근거없는 소문이 난무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퍼뜨려 빠른 속도로, 또 갈수록 점점 더 극단적으로 되어 퍼지게 된다는 데 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상대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들만 선택적으로 퍼뜨려 스스로 정치인들의 선동에 앞장서기도 한다.

이러한 흑색선전은 금품·향응공세 등으로 어수선하고 들떠있기 쉬운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일종의 몰개성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수선하고 들떠있는 무리속에서 자신의 자의식을 상실하고 무리속에 합몰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선동에 쉽게 물들게 된다. 또한, 사고능력이 감소되어 정확한 판단이 흐려지고 평상시의 억제에서 풀려나, 이와같이 정치판을 흐리고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근거없는 모략들을 퍼뜨리는, 일종의 반사회

적 행동에 개입되게 되는 것이다. 소문이나 흑색 선전은 또한 정보가 전달되는 인지과정에 의해서도 왜곡되게 되는데, 즉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나 흥미를 끄는 측면은 더욱 과장되고 반면 배후 상황의 세밀한 측면들은 생략되고 각색되어진다. 이러한 소문이나 흑색선전은 사회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클수록 더욱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된다(Allport & Postman, 1958).

이와같은 흑색선전은 정치적 신념과 정책에 대한 숙고대신 선동과 모략과 부화뇌동에 의해 투표가 결정되도록 만들어 우리의 정치풍토를 저질의 3류 소설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후진성과 비효율성을 조장한다.

지역연고에 의한 투표 경향

우리의 선거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성향은 지역연고에 의거한 투표 경향이다. 표 7에 나타난 제 14대 총선결과만 보아도, 민자당은 경상도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고(56%), 반면 민주당은 전라도에서의 지지율이 그보다도 더욱 높았다(76.2%). 이러한 지역연고에 의한 투표 경향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직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당총재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정당이 그 지도자와 동일시되고 또한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나 정당동일시(parties identification)가 정당 지도자의 출신지역과 자신의 출신지역과의 일치여부에 의해 결정되어, 지도자의 출신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로 지지를 받게 됨을 보여준다(박찬욱, 1992).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에 비해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우리의 사회행동은 학연, 지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학연과 지연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의와 관심으로 대하지만 그러한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이고 무관심하게 대한다(한규석, 1991). 이와같은 우리의 연고주의 성향 - 특히 지역연고주의 성향 - 을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부추기고 표동원에 이용해 와서 몇번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는 동안 유권자들의 정당선호 혹은 정당동

일시가 정당지도자의 출신지역에 의해 크게 결정되게 되었고, 지역감정과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7. 14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출신 지역별 투표 정당 (단위 : %)

투표정당 출신지역	민자	민주	국민	신정	민중	무소속
서울	23.3	36.9	35.0	0.0	1.9	2.9
경기	45.9	25.4	19.7	0.0	2.5	6.6
강원	52.7	9.1	27.3	0.0	5.5	5.5
충청	37.1	27.0	17.0	1.3	0.6	16.4
전라	15.7	76.2	3.6	0.9	0.0	3.6
경상	56.0	14.3	9.8	0.7	4.2	14.0
제주/이북	50.0	0.0	35.7	0.0	7.2	7.2
전체	39.0	33.6	14.8	0.6	2.3	9.7

출처 : 박찬욱(1992)

이와같은 지역연고에 의거한 투표성향은 정당의 정책에 대한 숙고없이 심정편향적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의 고안이나 개발을 게을리하고 학연·지연에 의한 사조직 다지기와 지역편중 개발정책 고안에만 열을 올리게 하는 등 정치발전과 우리 사회의 화합에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거운동원·동원청중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외국의 경우에서 처럼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그리 흔하지 않다. 즉, 후보의 정책에 동조하고 그 후보를 지도자로서 밀어주는 것이 나라 정치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정치적 신념에 의한 자원봉사자 대신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기 위한 운동원들이 많다. 심지어는 대학생까지 불법으로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여 14대 총선과 대선에서 「한택회」와 「통일모임」 등의 대학생조직이 결성되어 불법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유세장 청중동원, 유인물과 전단 배포, 전화걸기, 우편물 발송등의 일을 하는데 일당 5만원이나 10만원 정

도 받으므로 이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 유세장에는 이들에 의해 돈을 받고 동원된 가짜 청중들이 어떤 경우에는 80% 이상을 차지하여 돈을 준 후보자 연설이 끝나면 우르르 자리를 뜨고, 상대방 후보의 연설에 야유를 퍼붓는 등의 작태를 벌여 저질의 선거 풍토를 만들어왔다.

이와같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왔고 고등교육을 받아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 대학생들까지 유세장에서 돈에 팔리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다시한번 우리의 정치문화의 저질화,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건전한 가치관의 와해와 물질만능주의, 정치에 대한 냉소 및 부정부패에 대한 무감각이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건전한 정치문화와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제언

위에서 우리나라 정치와 선거의 문제점으로 금권정치·관권개입·흑색선전·비민주적 정당운영을 들고 그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맞물려 그에 이용되거나 그를 부추키는 시민의식과 행동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릇된 정치의식과 행동이 변화되어, 일반시민들이 정치인들에 의해 끌려가고 선동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치를 감시하고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압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으로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치인들로 하여금 부정한 정치는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도태될 수 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시민정신과 행동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몇가지 기초적 방안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깨끗한 선거·정치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이 공정한 선거풍토와 정치문화의 정립과 시민정신의 고취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91년 자치

단체의원 선거때부터 발족되어 14대 총선, 대선에도 활동해온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으로 표기함)의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선협은 경실련, 한국노총, 여성유권자연맹등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벌였다. 그 활동은 다양하나 주로 공명한 선거과정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 국민들에게 투표참여·금품향응거부·선거부정고발을 호소하였고 또한 선거고발창구를 운영하여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려우나 14대 총선과 대선이 비교적 이전의 선거에 비해 공명한 선거로 평가된다는 점, 또한 14대 총선 후보자들의 81.5%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시민단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하여 제 1의 공헌자로 지목되었다는 점등에서 그 공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손봉숙, 1992).

이와같은 시민단체들의 공명선거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자발성과 공정성에 있다. 즉 정부나 어떤 다른 기관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벌이는 주권의식의 회복과, 밑으로부터의 정치의 확립을 위한 운동이므로 국민들에게 자기설득 과정을 통해 스스로 주인의식과 정치효능감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등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같이 시민들의 자발적 토론과 활동이 스스로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데에 큰 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Lewin(1947)이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민운동을 통한 계몽과 교육이 깨끗한 정치·민주정치의 정착을 위해 보다 성공적이라면, 보다 장기적이고 상설적인 활동과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의 몇몇 유명인사 중심이 아니라 보다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뜻있는 시민들을 더욱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손봉숙, 1992). 또한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 협조도 시민운동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외에도 정부의 공익광고나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통해 올바른 정치문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사회교육이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시민운동이나 공익 광고를 할 때 그 내용을 그저 혼계성의 일반적인 구호에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화·체계화·정밀화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금품·향응 선거의 비싼 댓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점, 「뇌물·매수」를 「인사·성의·존경」으로 착각하는 우리의 인식 경향과 정치인들에 의한 이용, 정치인들의 일반시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등, 정치현상에 개입된 정치의식과 행동에 대한 보다 세분화되고 정밀한 분석에 의거하여 홍보내용을 만듦으로써, 시민들이 자기 자신의 정치의식과 행동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하고 또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적 행동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정치문화의 정립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방안은 역시 교육에 있다 하겠다. 특히,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올바른 투표행동과 습관 혹은 자발적 정치참여등의 정치적 사회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즉, 국민학교때부터 반장선거나 회장선거를 활성화시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명선거를 경험하도록 하여 앞으로의 투표행동·정치참여에 대한 역할연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교사·학부모들이 서로 협조하여 공정한 선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성인들의 정치판과 닮은 초대·금품 제공 혹은 선생님의 은근한 암시와 종용등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철저히 근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도 훌륭한 정치가상을 제시하고 자발적 정치 참여나 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시민운동과 학교교육 혹은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행동과 의식 그리고 그 심리기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 분석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정치 후보자들에 대한 인상형성, 정치적 신념, 감정, 정보처리,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한 기억등과 같은 정치

인지 분야(Kuklinski, Luskin, & Bolland, 1991), 투표효능감, 선거관심, 투표의사, 주변사람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인지등 정치심리학과 설득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고 이들의 연구가 정치인들과 정부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Kinder & Sears, 1985). 앞으로의 우리의 보다 성숙되고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정치 태도와 정치 인지 및 행동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공선협편(1992).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활동보고서 (1992 상반기, 하반기).
- 김광웅(1992). 한국인의 투표성향. 우리동네 선거 이야기·나라이야기·고쳐야할 선거이야기. 서울: 예음.
- 김광웅 편(1992). 우리동네 선거이야기·나라이야기·고쳐야할 선거이야기(김광웅편). 서울: 예음.
- 김형국(1992). 참여와 방관의 틈사이에서. 우리동네 선거이야기·나라이야기·고쳐야할 선거이야기(김광웅편). 서울: 예음.
- 박찬욱(1992).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 지지 분석.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77-220.
- 박찬욱(1993).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 14대 총선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3), 153-174.
- 서용석(1992).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과정분석.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이은진·김석준외저).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8). 국민의식조사 연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0). 21세기를 향한 국민의식 성향조사 연구.

-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1993). 한국 사회 : 오늘과 내일.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 손동현(1993).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위한 시민의 자세. 「정사협」 공개토론회 발표 논문.
- 손봉숙(1992).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민운동. 한국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373-390.
- 이은진 · 김석준외(1992).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이남영(1992). 투표참여와 기권 : 14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135-160.
- 이남영 · 한우창 · 김장권(1993). '깨끗한 정치'에 관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사협 공개토론 발표논문.
- 조혜정(1992). 자치, 자율문화의 토대다지기. 우리 동네 선거이야기 · 나라이야기 · 고쳐야 할 선거이야기(김광웅편). 서울 : 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8).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1). 여론조사결과분석보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3). 유권자 의식조사.
- 차재호 · 정지원(199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50 - 163.
- 한규석(1991). 집단주의 - 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10(1), 1-19.
- 한덕웅(1994).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각.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발표논문.
- 현대사회연구소(1993). 국민여론 조사보고서. 현대사회연구소.
- Allport, G. W. , & Postman, L. (1958). *The psychology of rumor*. New York:Henry Holt and Co. , 1975.
- Kinder, D. R. , & Sears, D. O. (1985).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action. In G. Lin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2, pp. 659-741). Reading, MA : Addison -Wesley.
- Kuklinski, J. H., Luskin, R. C. , & Bolland, J. (1991). Where is the schema? Going beyond the "s" word in political psycholog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1342-1356.
- Lewin(1947). Group decision and social change. In T. M. Newcomb & E. L. Hartley (Ed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Rosenthal, R., & Jacobson, L. F. (1968). *Pygmalion in the Classroom*. New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People Affecting Politics : Focusing on the Election Processes

Hai-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u University

The passage of the political reform act made the righteous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people more important for the establishment of clean political climate in the future. The problems of unhealthy and weak citizenship and behavior of people that had been intertwined with the problems of the structural and systemized irrationality in politics are identified as follows : the problems of requesting as well as receiving the monetary and treating offers, abstention from voting, spreading unrooted negative propaganda, voting based on regional relationship with the candidates and finally, the paid political canvassers and the bogus audiences at campaigning places.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involved in these problems are diverse : the fact that in our collectivistic culture, the morality judgment of behavior often relies on how the majority thinks and behaves, the confusion of the 「bribery」 with 「etiquette · sincerity · respect」, the lowering of voting efficacy, the increase in political helplessness, and finally the misled political identification based on regional relationship with the candidates. It is proposed that to further more active and mature citizenship and political behaviors of people, the expansion and activation of civil movement for clean election and politics, the education and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children from the early ages through role playing in fair school elections and finally, more support for the research on political behaviors and attitudes are needed.